

“송정동 성매매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존치”

광산구 설문조사 결과 현행유지 응답률 높아...경찰 합동 점검 지속

광주 유일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 주민·학생 설문 결과에 따라 당분간 존치하게 됐다.

광주 광산구는 최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해제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고 27일 밝혔다.

광산구는 송정역사 현대화 및 투자 선도시구 개발사업 추진, 1913송정역시장 조성 등 과거와 달라진 상황에서 송정동에 있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필요성을 재검

토하기 위해 설문에 나섰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구청 누리집 투표, 21개 동 가가호호 및 통행금지구역 인근 3개 중·고등학교 방문조사를 통해 이뤄진 설문에는 총 1425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512명(35.9%)이 전부 유지를, 504명(35.4%)은 전부 해제를, 387명(27.2%)은 일부 구간만 유지를 선택했다. 22명이 제시한 답변은 무효로 처리됐다.

광산구는 설문 결과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지역을 종전대로 유지하며 경찰과 합동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송정동 '1003번지'로 불리는 이곳은 성매매하는 숙박시설과 유흥업소가 밀집해 4개 구간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군부대가 가깝고 열차역이 인근에 있어 지난 1950년대부터 성매매 집결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1999년 8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광주에서 유일하게 청소년 출입과 통행을 24시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05년엔 업소 화재로 여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

생하고, 다른 신도시 지역에 안마방이나 오피스텔 등 변종 성매매업소가 많아져 현재는 송정동 성매매업소 대부분이 폐업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현장 실사를 펼쳐 업소 폐업과 재개발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으로 4개 구간 가운데 3곳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유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광산구에 전했다. 다만, 여인숙 등 성매매 의심 숙박업소가 일부 남은 1개 구간에 대해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존치가 타당해 보이며 해제 시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납세자 권리 보호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광주시는 지난 22일 시청 4층 세미나실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지방 세정의 공정한 정책결정을 위해 2019년도 제1차 광주광역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했다.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대학교수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고 호남세무법인 대표 윤경도 세무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며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 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등 지방세 부과와 징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20년 12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김광휘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업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무분야에 최고의 전문가인 위원들이 자주제원 확충과 납세자의 권리보호라는 상충된 이해관계를 적법하고 균형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산불 초동진화 장비 점검

광주 북구청 공원복지과 산불진화대원들이 27일 운동장의 현상상황실에서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한 진화장비세트를 점검하고 있다.

광주형 마을자치공동체 19개 마을사업 추진

소통하는 공유부엌·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 등 135억 투입

광주시는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광주형 마을자치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올해 135억원 규모의 19개 마을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27일 “관련 부서와 자치구, 마을활동가, 중간지원조직,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19개 마을사업을 마련,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전략

마을(협치마을, 주민자치회 준비마을, 마을의제 실현), 마을분쟁 해결센터 소통방, 광주마을교육공동체, 공유축진 사업, 소통하는 공유부엌,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 마을모임 형성지원, 주민자주공모, 인권마을 형성지원 등이다.

또 여성·가족 친화마을, 광주형 도시정원 조성, 순환복지공동체, 마을평생교육지원, 마을기업 육성, 생태문화마을 만들기, 광주다운 주민자치 활성화, 광주형 공

동체 주택건설사업, 빈집 정비사업, 생생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올해 사업은 마을별 특성과 성장단계에 따른 씨앗기-새싹기-열매기 등 맞춤형 사업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인권, 여성·가족, 복지공동체,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다.

광주시는 지난 10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마을사업 참여를 원하는 마을공동체 주민과 관계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마

을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통합설명회 마친 10개 마을사업에 대해 오는 2월 8일까지 광주시를 통해 공모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과 온라인 ‘시민참여광장 바로소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김준영 자치행정국장장은 “앞으로도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마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라며 “행복한 마을 자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마을주민, 마을활동가 등과 함께 마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겨울가뭄 지속 산불 비상체제 가동

시·군 대책본부 운영 여수·순천 등 헬기 7대 배치

전남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오는 5월15일까지 ‘불철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 기간동안 도를 비롯한 시·군에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신속한 감시와 초동진화를 위해 헬기 7대를 여수와 순천, 담양, 강진, 함평, 진도 등 7개 권역에 전진배치한다.

또한, 산불 감시 인력 1120명도 시·군별로 운영하면서 예방 및 초동 진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묘객과 산림 휴양객이 많은 설 연휴와 어린이날 연휴 등 긴 연휴와 주말에는 시기별로 특별 대책을 운영하고, 감시 인력을 위험지역에 집중 배치한다.

특히 설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소각 금지 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또 기상 여건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산불 경보’ 발령과 해제를 유연하게 대처해 상황에 따른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도는 시·군 합동으로 산불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지르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산불보호법’ 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울 들어 전남지역에선 겨울가뭄이 계속되면서 나주, 진도, 보성, 강진, 완도 등에서 7건의 산불이 발생해 2.28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설 제수용품 검사 ‘안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시민 소비가 많은 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4일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설 제수용품·가공식품류 70건, 농산물 71건 등 총 141건을 대상으로 안전 검사를 했다.

주요 검사항목은 유과·약과 등 과자류의 산가(酸價), 떡류의 사카린나트륨,

참기름 등 식용유지류의 산가, 두부·동태전 등 전류의 식중독 원인균, 농산물의 연도살균 등 잔류농약 229종, 수산물의 유해물질 등이다.

검사결과 산가, 사카린나트륨, 잔류농약 등 이화학적 검사항목에서 141건 모두 기준치 이내 및 식중독 원인균 불검출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적합’으로 판정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내 손 안의 노동상식’ 책자 제작 배포

부당 권리침해 사례 등 담아

광주시는 27일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권리침해 사례와 해당 법령을 모은 ‘2019 내 손 안의 노동상식’을 제작해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이번 책자에는 노동기본권, 청소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등 4개 분야에 해당하는 법령과 사례를 쉽게 설명했다. 노동법령과 사례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구성했다.

‘노동기본권’ 편에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임금, 근로와 휴게, 퇴직과 실업급여 수급절차, 업무상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방법 등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이 되는 권리를 담았다.

또 ‘청소년 노동자 노동인권’ 편에는 청소년의 특별 보호와 노동법상 모든 권

리보장을, ‘여성 노동자 노동인권’ 편에는 여성의 특별 보호와 남녀평등을,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편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대우 금지 등을 포함했다.

광주시는 노동현장과 노동 인권교육 참가자들에게 교재로 제공하고 노동계와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상공회의소 등 경영계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책자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이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림형 태양발전소 분양

선착순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림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